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공동성명 >

60억대 자산가 김건희씨의 월 7만원대 건강보험료가 윤석열 후보의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2017년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양평 땅을 비롯해 60억 원대의 재산이 있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월 7만 원 정도만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용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4년~2017년까지 건강보험료를 월 7만 원 수준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그런데 당시 김건희 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포함해 62억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김 씨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 4,650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 원 상당을 가진 고액자산가로 월 1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스스로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편법을 통해 월 2만 원대의 건보료를 납부해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김 씨 또한 재산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허위 소득 신고를 했다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과 판박이 꼴인 셈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윤 후보가 지난 11월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여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발언의 의도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이야기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고액자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수단으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인 김건희 씨와 같은 고액자산가들의 보험료를 깎아주기 위한 꼼수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본인 가족들의 보험료는 꼼수로 줄이려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윤 후보의 진정성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게다가 윤 후보의 장모는 다름 아닌 불법 사무장병원을 통해 국민이 낸 보험료를 부정수급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건강보험료의 공정성과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명박, 김건희 같은 고액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는 내버려 두고,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과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이 과연 윤석열식 공정이며 정의인가?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면 세금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액자산가들의 보험료를 인하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후보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운운하기 전에, 고액자산가 무임승차를 어떻게 막을 건지부터 먼저 답해야 할 것이다.

2021. 12. 17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